

# 반도체기업 시설투자 예타 완화·기업 세액공제 대폭 확대

### 국민의힘 '반도체 지원법안' 4일 발의 인허가 처리기한 30일서 15일로 인력양성 사업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외국인 기술자 세 감면 기간 확대

국민의힘이 반도체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안'을 2일 발표했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건을 묶은 패키지 법안으로,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발의될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 단지의 조성 단계부터 지원에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도 및 전기 등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기반시설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면제 논의 범위를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처리기한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전략산업 및 기술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인력양성 사업에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전국적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며, 현장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성화 고교 중에서 산업을 지칭한다는 것"이라고 특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 공무원 등을 임용할 경우 임용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내년부터는 겸직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6~16%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 30%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해당 과세연도 투자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규모 등을 초과할 경우 5%포인트를 추가 공제해준다.

또한 기업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대학 등의 중고자산을 무상 기증하는 경우 기증자산의 시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향자 특위 위원장은 회견에서 "총각을 다루는 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반도체 산업이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적극 참여해달라"며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 및 범부처 컨트롤타워 설치를 촉구했다.

또 "야당 의원들도 각 지자체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며 "광주·전남 지역은 도시·시장도 70~80%가 국회 특위 구성을 문 의하고 있고 (민주당 소속인) 김동연 경기도 지사도 참여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31년 만에...행안부 경찰국 결국 출범

### 3과 16명...사실상 장관 직속 경찰위 "강행 유감...법적 대응"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이름의 경찰업무 조직이 2일 출범했다.

경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지 석 달여 만이다. 이에 따라 내무부(행안부의 전신) 치안본부가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에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이 생기게 됐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정 ▲국가경찰위원회 안전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법률로 규정된 행안부 장관의 권한 행사를 보조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형식적으로는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사실상 이상민 장관 직속으로 운영된다.

초대 경찰국장은 김순호(59·경장 경제) 치안감

이 맡으며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총경)이,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민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보임됐다. 나머지 경찰·경감·경위급 9명은 전원 간부후보 또는 일반(순경), 변호사 경력 채용 출신으로 파양됐다. 경찰국을 제외한 경찰 12명 중 경찰대 출신은 한 명밖에 없다.

하지만 국가경찰위원회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과 관련해 "법령·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제기해 왔는데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위 위원 7명 전원은 이날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에서 허용되는 법적 대응 조치를 수행하고자 한다"며 "자문위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법적 조치 시한 안에 결론을 내려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위는 또 "지안 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경찰위는 치안 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 국힘 '비대위 전환' 속전속결...전국위 소집 안전 의결

### 5일 전국위...비대위 출범 결정 이준석 "그들의 탐욕 계속" 반발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소집 안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일 상임전국위와 전국위가 개최돼 비대위 출범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를 향해 "절대반지를 향한 그들의 탐욕은 계속된다"며 직격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체제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총의를 모은 데 이어 최고위 의결로 전국위 소집까지 속전속결로 결정되는 등 친윤(친윤석열)계의 주도 아래 혼란에 빠진 당 수습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의 최고위 의결 참여 등을 놓고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

되는데다, 비대위 성격과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내용 상황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배현진·윤영석 최고위원,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 재직 최고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참석해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 안전을 가결했다.

회의에는 사퇴 처리가 완료된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을 제외한 재직 인원 7명 중 4명이 참석해 과반 정족수를 채웠다.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의 경우 앞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퇴서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위 의결을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

비대위 체제 전환에 반대했던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은 불참했다.

이날 중 전국위 개최 공고가 이뤄지면 사흘 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오는 5일 상임전국위·전국위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상임전국위에는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당헌·당규 유권해석 안전이 상정된다.

당헌 96조는 '당 대표 권위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같은 비대위 출범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국위에는 비대위원장 임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및 비대위원장 임명 안전이 상정된다.

당헌 96조는 '비대위원장은 전국위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넓히도록 당헌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라고 7월 29일에 육성으로 말한 분이 표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8월 2일에 표결하는군요"라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우상호 "1·2·3당 비대위...정당정치 반성할 대목"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국민의힘이 결국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한다"며 "1당·2당·3당이 모두 비대위 체제로 접어드는 희한한 정치상황을 경험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어느 당 비대위가 더 잘하나, 누가누가 더 잘하나 이런 경쟁이 되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

혔다.

앞서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월 대선에서 패배한 직후 '윤호중·박지현 비대위'를 가동하다 6·1 지방선거 패배 후 '우상호 비대위' 체제로 전향했고, 원내 3당인 정의당은 지방선거 패배 뒤 '이은주 비대위'를 구성한 바 있다.

특히 우 위원장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며, 반성을 해야 할 대

목"이라며 "정당정치가 얼마나 취약하면 이렇게 모든 정당이 비대위 체제로 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정치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고민해볼 필요도 있다"고 부연했다.

우 위원장은 "거듭된 총고에도 정부는 계속 문재인 정부 때의 인사 문제를 갖고 부처를 압수수색하거나 장관 및 실무자를 소환조사하고 있다. 더는 구두경고만 할 수 없었다 싶어서 저희도 이번 주부터 구체적 '액션플랜'을 세워 맞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첨단우리병원**

봄에 떠나는 그림은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승선문의**  
061-834-3434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투어나우 : 062-575-8019